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전망이론적 '전망'*

박지연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jypark@koreaexim.go.kr

I. 서론

경제제재는 국가 혹은 집단이 무역 및 금융관계에 대한 철회 혹은 철회에 대한 위협을 통해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다. 20세기 들어 경제제재의 발의 빈도는 급격히 증가해 왔지만 모든 경제제재가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경제제재의 효과란 발의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상국의 수용 정도를 의미하므로, 대상국들이 발의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각기 다른 의사결정을 내려 왔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요구사항의 제재에 대해서 한 국가가 시기별로 다른 대응을 보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자 미국은 1994년 개발원조 공여의 중단, 체육·문화·과학 등에서의 교류 및 지원 금지, 무기수출 금지 등의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의 NPT 복귀를 요구하였다. 결국 경제제재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제네바합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였다. 한편, 2002년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 중유제공 중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사업 중단 등을 포함한 경제제재 조치를 발의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까지 4차례의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강력히 저항하였다.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 북한의 대응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전망이론은 경제제재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준거점'이라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제재의 효과 즉, 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이 대상국의 대내외적 상황에 기반한 준거점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망이론의 함의를 바탕으로 과거 발의된

* 본 글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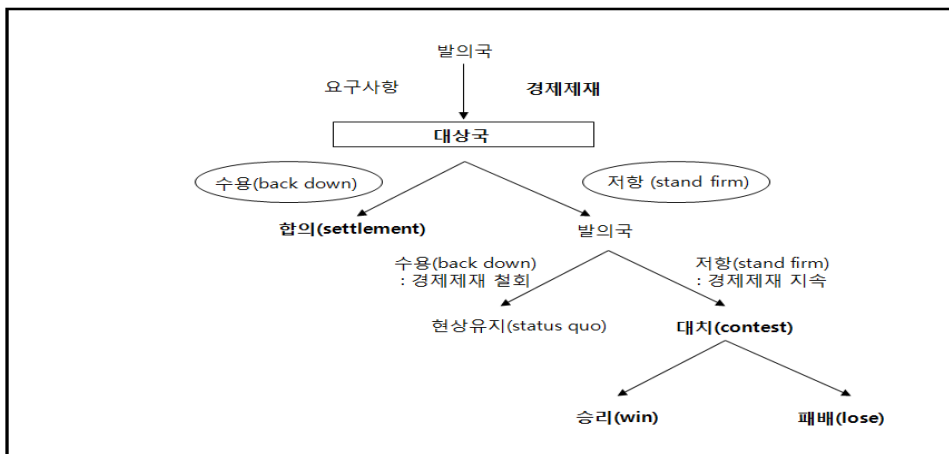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분석한다. 더불어 지난 3월 3일 채택된 최근 유엔결의안의 효과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II. 전망이론과 경제제재

경제제재의 흐름도는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발의국은 특정 외교적 요구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제재를 발의한다. 대상국은 이에 대해 수용(back down)과 저항(stand firm)의 선택을 가진다. 만약 대상국이 요구를 수용한다면, 양측의 합의(settlement)가 이루어져 게임이 종료된다. 그러나 대상국이 경제제재에 저항한다면, 발의국은 경제제재를 철회하거나 지속할 수 있다. 만약 철회한다면 대상국은 경제제재가 발의되기 이전의 상태(status quo)를 유지하며, 지속한다면 대상국은 발의국과의 대치(contest) 상태에 놓이게 된다. 대치의 최종적 결과로서 대상국은 승리(win) 혹은 패배(lose)를 예상하게 된다.

대상국은 선택의 결과인 합의와 대치의 기대효용을 비교하여 최종 선택을 내린다. 현실에서의 대상국의 선택은 완전 합의 혹은 완전 저항이라는 이분법적인 선택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수용 혹은 저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수용과 저항이라는 두 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점을 포함하여 수용과 저항을 연결하는 선상에서 어느 한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상국의 선택을 ‘수용의 정도’ 혹은 ‘저항의 정도’로 분석해 보자. 우선 두 선택의 효용이 동일하여 선택의 선호가 무차별한 지점을 경계점 s^* 라고 하자.

[그림 1] 경제제재와 대상국의 선택



예를 들어 대상국이 요구를 수용한 후 $s_1(s_1 \langle s^* \rangle)$ 에 놓인다면 대상국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s_2(s_2 \langle s^* \rangle)$ 에 놓인다면 대상국은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결국 s^* 는 대상국이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며, 저항하는 마지막 지점이 된다. 따라서 대상국의 선택은 경계점 s^* 를 찾는 것이 되며, 대상국이 수용 가능한 s^* 가 작을수록 경제제재의 효과는 높다고 분석할 수 있다. 전망이론 역시 경계점 s^* 를 통해 경제제재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분석틀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전망이론의 가치함수와 확률가중함수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망이론은 준거점 $R(0 \leq R \leq 1)$ 에 따라 s^* 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망이론이 예측하는 통상적인 값을 대입하면, R 이 증가하면 s^* 는 증가한다.¹⁾ 즉,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제재에서 준거점이 증가하면 제재 수용에 따른 효용 감소가 크고(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상대적으로 제재 저항에 따른 효용 감소 크기가 작기(손실이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 때문에 제재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낮은 제재의 효과로 나타난다.

여기서 핵심은 준거점²⁾의 측정이 된다. 전망이론을 도입한 국제정치경제 연구들은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준거점으로 정치·경제적 상황의 특징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McDermott(1994)는 국내 정치적 안정도를 카터 대통령의 의사결정의 준거점으로 다루고 있다.³⁾ 그의 논문에 따르면, 카터 대통령은 자신이 인지했던 국내 정치적 불안의 정도를 근거로 선택지들 간의 기대효용을 판단하였다. 카터는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큰 손실을 전망하였다. 반면, 위험을 동반하지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란의 미국인 인질을 구출해 낼 경우에는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Hwang(2005)은 북한의 경제상황, 군사능력, 대외관계의 특징을 북한 지도부의 준거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경제적 불안정성 및 군사력 약화와 대외관계 악화가 북한의 대미 강경정책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⁴⁾ 더욱이 경제제재의 효과를 분석한 여러 논문들도 국내외 정치·경제적인 요인들을 경제제재의 효과를 결정짓는 독립변수라고 분석한다. 첫째, Hufbauer *et al.*(2007)에 따르면 정치·경제 안정도는 경제제재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⁵⁾ 성공한 경제제재의 경우에 대상국들의 정치·경제 안정도 지수의 평균은 1.9이며, 실패한 경제제재의 경우에 해당값은 2.1인데,

1) 연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박지연,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을 참조.
 2) 준거점 이외 변수들에 대한 논의는 박지연,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을 참조.
 3) McDermott, Rose, "Prospect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Iranian Hostage Rescue Mission," in Barbara Farnham (ed.), *Avoiding Losses/Taking Risks Prospect Theory and International Conflic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pp.75~78.
 4) Hwang, Jihwan, "Weaker States, Risk-Taking, and Foreign Policy: Rethinking North Korea's Nuclear Policy, 1989-2005," University of Colorado Ph.D Dissertation, 2005, p.97.
 5) Hufbauer *et al.*,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rd edition,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pp.166-168.

이는 성공한 제재의 대상국이 실패한 제재의 대상국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Nincic and Wallenstein(1983)도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이 경제제재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대상국의 경우에 외부의 경제적인 공격에 대하여 경제적 저항력이 약할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응집력이 약하여 쉽게 분열되고, 이에 정책결정자는 경제제재에 저항하기 어려워진다.⁶⁾ 따라서 본 글은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여 북한의 준거점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북한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다.

III.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북한

1.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응

북한의 핵활동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된 것은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에 의해 북한 영변지역의 사진이 공개되면서부터였다. 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 서명'과 '핵사찰' 카드를 사용하여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이끌어 내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에 협조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이 NPT 탈퇴를 언급함에 따라 미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제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⁷⁾ 미국은 북한에게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한 경제제재를 언급하였는데, 실제로 미국,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의 NPT 탈퇴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미국은 중국에게도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통보했다.⁸⁾ 1994년 6월 3일 갈루치(Robert Gallucci) 차관보는 한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하였다.⁹⁾ 이는 개발원조 공여의 중단, 체육·문화·과학 등에서의 교류 및 지원 금지, 무기수출 금지 등을 포함한 경제제재였으며, 만약 이러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IAEA의 특별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역과 금융거래를 중단한다는 강경조치였다. 이때 북한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은 자국의

6) Nincic, Miroslav and Peter Wallenstein, *Dilemmas of Economic Coercion: Sanctions in World Politics*, Praeger, 1983, pp.107~112.

7) Wit, Joel, Daniel Poneman and Robert Gallucci, 김태현 역, 『북핵위기의 전망』, 서울: 모음북스, 2004, p.38.

8) 위의 책, p.69.

9) Hufbauer et al.,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rd edition,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Case Histories and Data No. 93-1; Drezner, Daniel, *The Sanctions Parado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280~282.

핵개발은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동결의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¹⁰⁾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기점을 계기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북미갈등은 완화되었고, 그해 10월 북미 간 제네바 합의로 제1차 북핵위기는 마무리 되었다. 본 제재의 경우 제재 대상국인 북한은 경제제재에 대한 위협만으로 제재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006년 9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유엔안보리는 이에 대응하여 5일 후인 10월 14일에 안보리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안보리 산하에 북한제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안보리결의 1718호의 대북한 제재는 무기금수, 자산동결, 해외여행 금지 이외 핵무기 등 WMD 및 탄도미사일 관련 거래금수, 사치품 금수와 의식 화물에 대한 검색 등 일부 특이 요소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제사회의 목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제재이행을 강제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추후 북한제재위원회가 지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또한 사치품금수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각국의 재량에 위임하였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국제재회의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발사와 5월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유엔은 안보리결의 1874호를 통해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게 된다. 결의안은 전면 무기금수, 금융제재 강화, 여행제한과 자산동결 대상 지정, 제재이행 감독을 위한 전문가패널 설치 등을 포함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지 43일 만인 2013년 2월에 결의안 2087호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결의안 협의 과정 중인 2013년 2월 3차 핵실험도 추진하였다. 결의안에는 제재 대상의 확대, 금수품목 확대, 북한의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 의식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등이 포함된다. 안보리 결의안 2087호의 특징은 제재 대상을 본문에 직접 첨부하여 이전의 제재위원회를 통한 지정보다 진일보한 형식을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미국, EU, 일본 등은 유엔을 통한 제재와 더불어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왔다. 미국은 적성국교역법, 대외원조법, 애국법, 이란·북한·시리아법 등의 제재법을 근거로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미국은 관련법을 바탕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적인 대북제재를 발의해 왔다. 예를 들어 2008년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 자산동결과 북한선박 소유 금지 등의 제재를, 2010년 행정명령 13551호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들을 추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행정명령 13570호를 통해 미국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금지 등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EU는 유엔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10) Wit, Joel, Daniel Poneman and Robert Gallucci, 김태현 역, 『북핵위기의 전망』, 서울: 모음북스, 2004, p.275.

〈표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선택

제재	수출입제재	금융제재	선박·화물·항공	기타 특징	북한 선택
UNSCR1718 ('06. 10) /기타 개별국 제재	- 일부 무기 관련 수출금지 - 사치품 수출금지	- 금융제재	- 의심 선박 및 화물 검색 - 여행 금지	- 구체적인 품목 및 대상 지정 안됨. - 이행보고서 제출 국가 71개국,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	- '09. 4 장거리 로켓발사 - '09. 5 핵실험
UNSCR2087 (13. 1) /기타 개별국 제재	- 사치품 수출금지 - 무기 개발 관련 품목 전면 통제 (캐치올)	- 금융제재 강화 및 대상 확대 - 사치품 구입에 사용되는 벌크캐시 제재	- 의심 선박 및 화물 검색 강화 - 여행 금지 대상자 추가 지정 및 강화	- 추가 도발 시 중대조치 표명 (트리거 조항) - 제재가 이행되기 전에 이미 북한의 핵실험 발생	- '13. 2 핵실험
UNSCR2094 (13. 3) /기타 개별국 제재	- 기존 제재 강화	- 기존 제재 강화 - 외교관 등의 이상행위 감시 포함	- 기존 제재 강화 - 항공기 통제 추가	- 기존 제재가 항목별로 강화, 그러나 중국의 소극적인 참여	- '16. 1 핵실험

왔을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금융, 무역 등에 대한 제재를 발의하여 강력한 북한 압력에 동참해 왔다. Council Regulation No. 324(2007년), Council Regulation No. 137(2013년), Council Regulation No. 386(2014년)이 대표적인 제재안으로 수출제한 품목의 추가 지정과 더불어 북한선박의 유럽항구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또한 유엔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 일본인 납치 관련 무역금지, 북한선박 입항 금지, 대북송금 제한 등의 대북제재를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요컨대 지속적이고, 강력한 제재 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재에 강력히 대응하는 결정을 내려온 것으로 분석된다.

2. 북한의 준거점 변화와 제재의 효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항의 원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본 글에서는 북한의 준거점 변화가 제재 저항의 주요한 원인일 것이라는 전망이론적 가정을 수용한다. 준거점 변화가 제재의 효과와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었는가는 직접적인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통계분석을 통한 회귀관계를 먼저 검증해야 하나, 본 글에서는 저자의 사전적 검증¹¹⁾을 바탕으로 북한사례를 살펴본다. 즉,

11) 통계분석은 박지연,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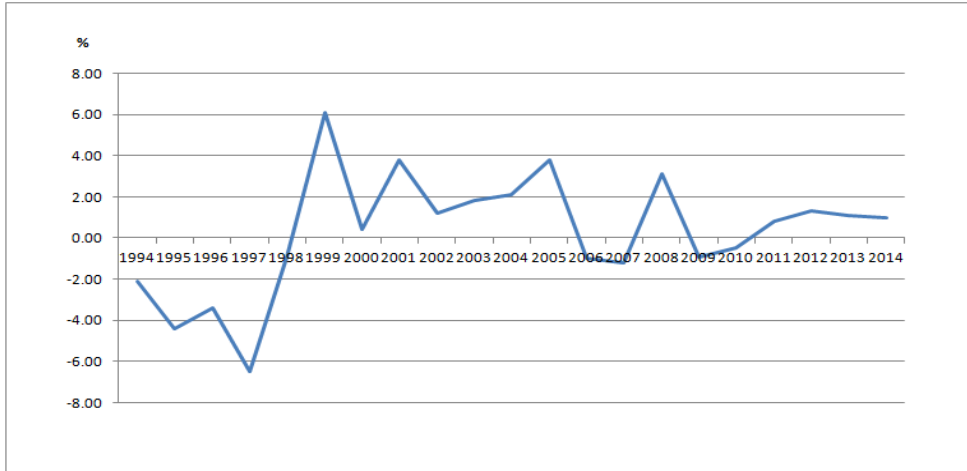
1990년대 북한의 준거점을 기준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준거점의 변화를 분석한다.

먼저 북한의 최근 정치적 상황¹²⁾은 1990년대의 매우 불안했던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의 경제제재 당시 북한은 정권 수립 이래 최대의 우방이었던 소련과 중국의 한국과의 수교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으로 정치적 안정성 유지에 매우 커다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스스로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해 “동유럽에 이은 북조선의 조락은 필연적인 시간문제”라는 외부 시각이 팽배해졌다고 인식할 정도로 북한의 정치적 상황은 안정은커녕 체제 자체의 유지를 우려할 정도로 불안정하였다.¹³⁾ 2000년대 초반 북한의 정치적 상황은 1990년대 초반의 ‘매우 불안정’ 상태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은 1997년 10월 총비서로 추대되었으며, 1998년 9월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되면서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더불어 김정일은 자신의 체제를 공고화하는 성격의 헌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제도적 기반 위에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해 갔다. 한편, 최근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은 1990년대와 비교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장성택 등 핵심 실세의 처형 등을 통해 김정은이 절대권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정치적 안정성 과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7월에 군부의 핵심 실세였던 리영호 총참모장을 전격적으로 해임하였으며, 이후 2013년 12월 8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해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시키고 사형까지 집행하였다. 이것은 김정은이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연안파와 소련파 숙청 그리고 1967년 갑산파 숙청 사례를 감안, 장성택파에 대한 숙청은 김정은 체제에 불안정을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정권을 더욱 공고히시킬 가능성이 있다.¹⁴⁾ 더욱이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상황 개선은 국내정치 안정성을 공고히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경제 또한 1990년대와 비교해 최근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이례적으로 인정하였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시장의 와해는 북한경제에 매우 커다란 충격이었다. 북한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소련과 중국의 국제가격 및 경화결제 요구는 북한의 원자재 수입 급감을 야기하였고,¹⁵⁾ 이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로 이어졌다. 더욱이 1995년부터 3년간 연속된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12) 1990년대와 2000년대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은 박지연(2013)의 IV장을 참조.
13) 강성길, 『선군시대의 조국을 가다』, 평양: 평양출판사, 2002, p.3.
14) 강성길,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국방연구』, 제47권, 제1호, 2014, pp.21~22.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북한경제백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pp.55~57.

[그림 2]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1994~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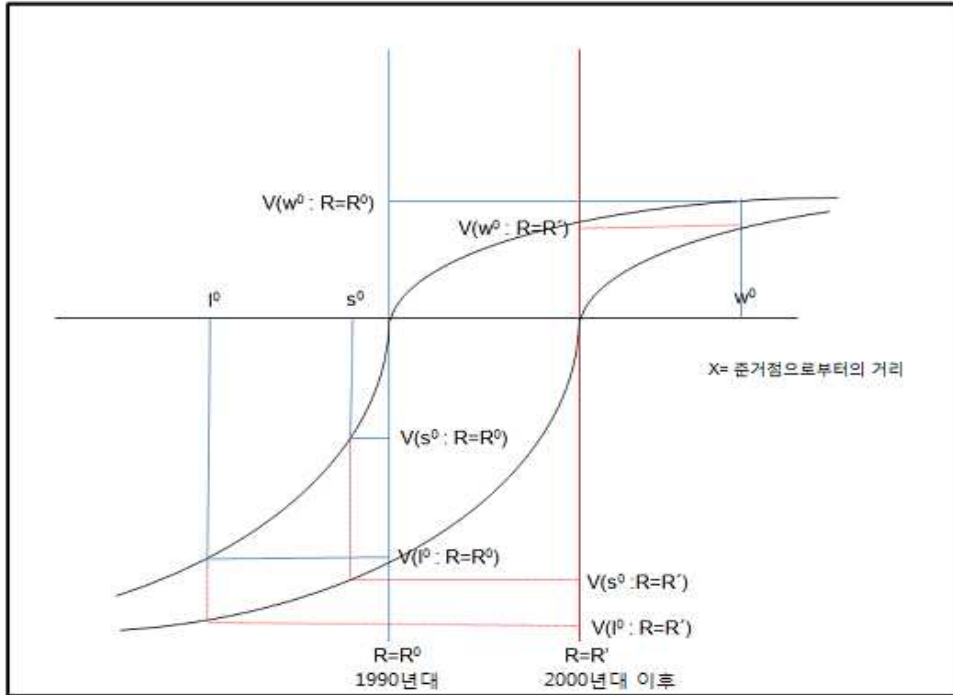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검색일: 2016. 3. 7).

-1.7%(1994년)에서 -6.8%(1997년)까지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상황은 2000년대 들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국제기구,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의 지원에 힘입어 북한경제는 1999년부터 플러스 성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경제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2000년대 들어 북한경제는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 일시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관찰되나 1990년대와 비교해 경제성장률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경제의 안정성은 정치적 안정성 확보와 함께 유지 혹은 개선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정치, 경제상황의 개선, 즉 준거점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그림 3]과 같은 분석을 가능케 한다. 북한은 준거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제재 수용에 대한 손실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 제재 저항에 따른 손실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제재에 강하게 저항하게 되었다. 정치,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은 제재 수용의 손실을 더욱 크게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조건에서보다 제재에 강력히 저항하게 되어 제재의 효과는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이다.

[그림 3] 북한의 준거점 변화와 제재의 효과



주: s는 '제재수용', w는 '제재 저항 후 승리', j는 '제재 저항 후 패배'를 의미.

IV. 전망이론적 '전망'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다방면의 제재 방안을 모색해 왔다. 유엔의 경우 기존 대북제재에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북한행·발 모든 화물의 검색 의무화, 의심 항공기 이착륙 금지, 항공유 수출금지 등을 추가하였다. 더불어 미국은 지난 2월 핵확산은 물론 불법행위, 인권침해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도 대상(세컨더리 보이콧)이 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법안을 마련해 상·하원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대통령 서명으로 공식 발효하였다. 이례적으로 중국 또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제재 조치에 합의하였으며, 북한의 추가적 핵무장을 막도록 협력한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독자적으로도 석탄거래 중단, 금융거래 축소 등 경제 압박 추진 중에 있다.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유엔제재 참여와 독자제재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는 과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특히 북중무역이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에 따른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제재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직접 제재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들의 제재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 다룬 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이론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준거점 상승의 추세는 대북 경제제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강력한 제재안의 발의와 철저한 이행이 북한의 준거점 증가 수준을 상회할 경우에만 제재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제재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제재 발의와 이행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북한에 대한 준거점 변화 유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길, 『선군시대의 조국을 가다』, 평양: 평양출판사, 200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북한경제백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박지연,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정성장,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국방연구』, 제47권, 제1호, 2014.
- McDermott, Rose, “Prospect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Iranian Hostage Rescue Mission,” in Barbara Farnham (ed.), *Avoiding Losses/Taking Risks Prospect Theory and International Conflic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 Hwang, Jihwan, “Weaker States, Risk-Taking, and Foreign Policy: Rethinking North Korea’s Nuclear Policy, 1989~2005,” University of Colorado Ph.D Dissertation, 2005.
- Hufbauer *et al.*,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rd edition,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 Nincic, Miroslav and Peter Wallensteen, *Dilemmas of Economic Coercion: Sanctions in World Politics*, Praeger, 1983.
- Wit, Joel, Daniel Poneman and Robert Gallucci, 김태현 역, 『북핵위기의 전말』, 서울: 모음북스, 2004.
- Drezner, Daniel, *The Sanctions Parado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웹사이트>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검색일: 2016. 3. 7).

